

미래 성장공간, 기회의 땅: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묻다

일자: 2025. 12. 11.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5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미래 성장공간, 기회의 땅: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묻다

일자: 2025. 12. 11.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2025-01

2025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미래 성장공간, 기회의 땅: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묻다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5.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I S B N | 979-11-6149-817-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정부 정책 추진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삶의 질정책연구센터’를 출범·운영하며, 매년 관련 연구기관, 학계, 농촌 주민, 현장 전문가 등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 구성원이 참여하여 지혜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서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은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 공간’을 비전 아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거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그리고 공공·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3대 전략으로 삼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 성장공간, 기회의 땅: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둔다’라는 주제로, 제5차 기본계획 시행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농어촌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 마을 모델 등 현장의 혁신적인 사례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모여 농어촌의 새로운 역할과 잠재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자료집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제안과 현장 사례, 그리고 종합토론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이번 논의가 농어촌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우리 농어

촌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밀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 두 봉**

I. 전문지원기관 발표

1. 제5차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 시행 1년, KREI 정책 지원 성과와 과제 3

II. 주제 발표

1. 농촌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 과제 19
2.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33

III. 사례 발표

1. 농촌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일 45
2. 위기 속에서 찾은 희망: 구양리 태양광 발전소 이야기 57

IV. 종합 토론 75

2025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1. 개요

- 일시: 2025. 12. 11.(목), 13:00~17:1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일정

일정		주요 내용	
1부	13:00~13:30		참석자 등록
	13:30~14:20	개회식	개회사
			환영사 및 축사
		발표	제5차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 시행 1년, KREI의 정책 지원 성과와 과제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14:20~14:30	수여식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정책 유공자 표창
2부	14:30~15:50		휴식 및 장내 정리
		주제 발표	농촌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 과제 박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사회연구실 실장
		사례 발표	농촌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일 서동선 협동조합 땀앤파 대표
			위기 속에서 찾은 희망: 구양리 태양광 발전소 이야기 전주영 경기도 여주 구양리 이장
	15:50~16:05		휴식 및 장내 정리
	16:05~17:10	종합 토론	(좌장)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 권인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조사·연구팀장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아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사무관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이정민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 대표 홍경진 농민신문 정경부장 황바람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
			청중 질의응답
	17:10		마무리 발언 및 폐회

I. 전문지원기관 발표



제5차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 시행 1년, KREI의 정책 지원 성과와 과제

김 수 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목차

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요
2. 정책 추진체계와 전문지원기관
3. 2025년 KREI 주요 지원 성과
4. 향후 과제 및 2026년 활동 방향

2025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제5차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 시행 1년, KREI 정책 지원 성과와 과제

2025. 12. 11.

김 수 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 성

1_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요	3
2_ 정책 추진체계와 전문지원기관	7
3_ 2025년 KREI 주요 지원 성과	11
4_ 향후 과제 및 2026년 활동 방향	23

1_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요

KREI

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이란?

농어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무총리 산하 삶의 질 향상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삶의 질 정책의 기본 방향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인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여건 개선,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사항
- 필요한 재원 투자계획 및 조달,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관한 사항 등
- 그 밖에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5차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2025~2029)

-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전략으로 재편
- 생활인구 유입 + 주거여건 개선 + 공공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 삶의 질 증진의 선순환

구분	기존 기본계획	5차 기본계획
기본이념	도농간 삶의 질 격차 완화	+ 농어촌 특화 성장전략 마련
정책범위	농어촌의 다양한 세대 계층 포용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
주요 부문별 전략	청주인구 유지	+ 생활인구 확대
	농수산물 기반 1·2·3차 산업 연계	농촌융복합산업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중심지 기능 강화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H/W정비, 인프라 확충	S/W 강화, 사각지대 해소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농어촌 특성 고려한 맞춤 서비스

제5차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2025~2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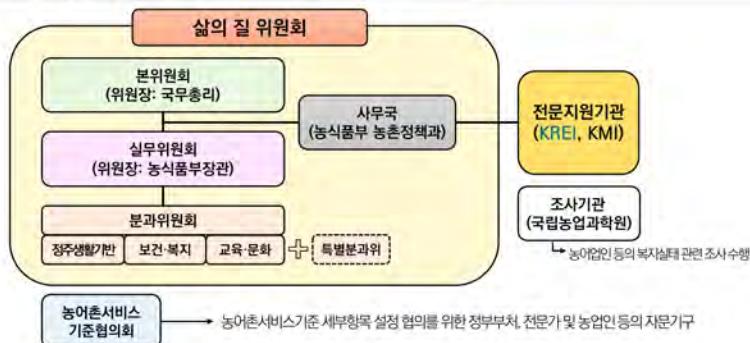
- 비전: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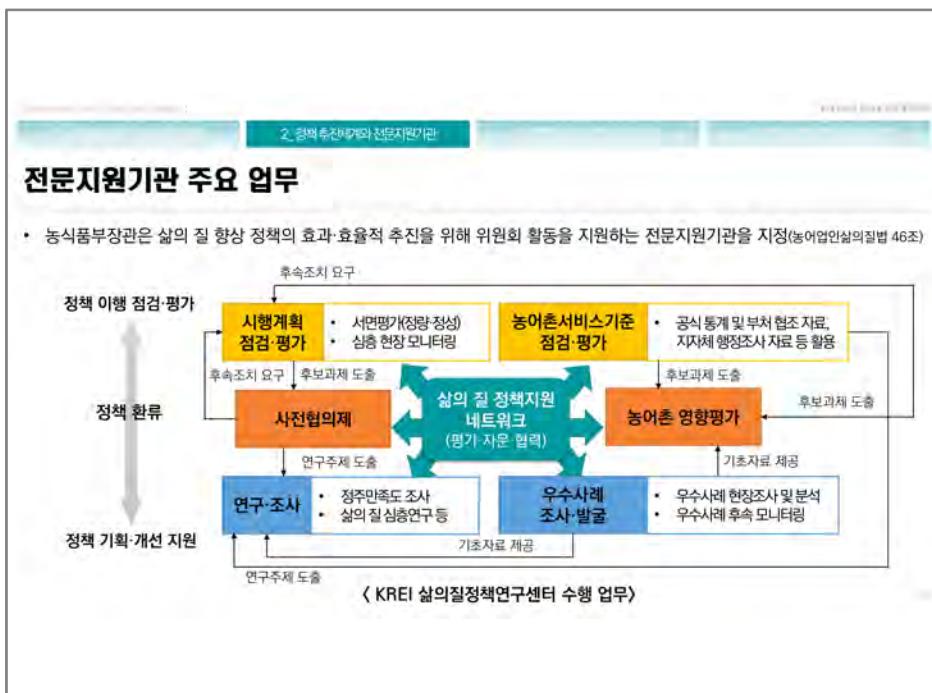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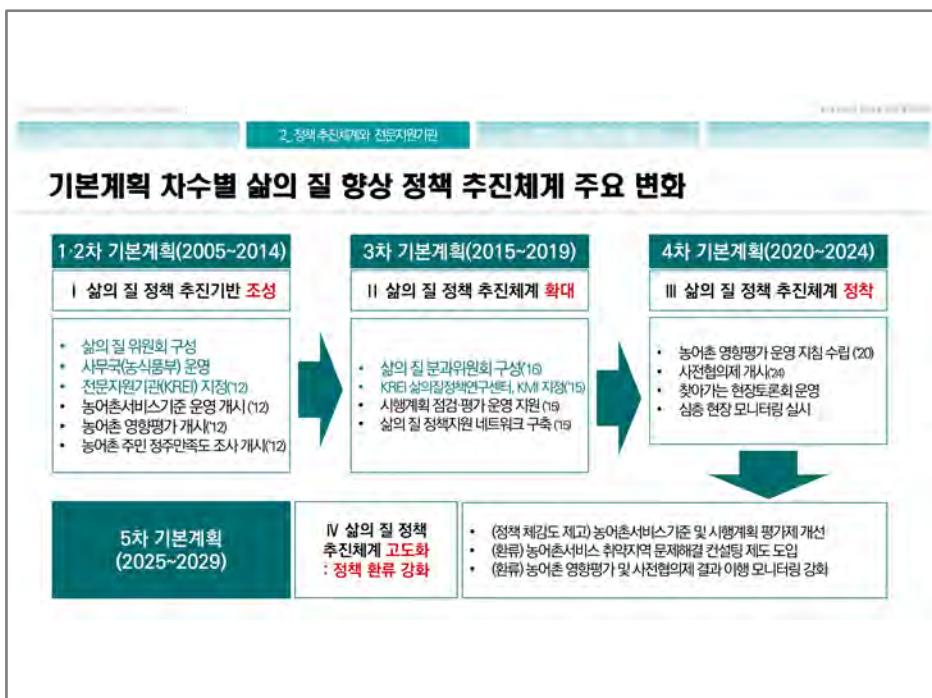
3대 추진 전략	12대 주요과제 (180개 세부과제)	
농어업·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촉진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혁신 이끌 인력 양성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공간 조성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농어촌형 돌봄서비스 확충 농어업인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식품사각 및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2_ 정책 추진체계와 전문지원기관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





3_ 2025년의 KREI 주요 지원 성과

KREI

3. 2025년 KREI 주요 지원 성과

실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실의 질 향상 175개 과제(‘24년 기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해당 부처에 결과 전달 및 의견 수렴

서면평가(상반기)

```
graph LR; A[1차 평가] --> B[부처 이의제기 수렴]; B --> C[2차 평가  
(이의제기 과제)]; C --> D[위원회 심의  
및 국회 제출(6월)]; D --> E[사전협의체 이행  
• 농어촌 영향평가  
(현장 모니터링)];
```

- 2025년 제5차 기본계획 추진에 대비한 평가 항목 및 기준 개편

기본평가(전체 과제)		상충평가(부문별 핵심 과제)	
구분(내장)	평가 항목(점정)	구분(내장)	평가 항목(점정)
운영 적합성(40)	- 예산집행률(%) - 사업 일정 준수 여부	정책 수행도(40)	- 사업의 중요성 -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
운영성과(50)	- 사업 성과 달성을(%) - 예산 확대 여부 - 대상 확대 여부	정책 효과(60)	- 농어촌 적합성 - 정책 체감도
현안 및 혁신 노력(10)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여부 - 언론보도 및 홍보 실적	기준(10)	- 타사업 연계 및 주민참여 - 주민 참여 정도

3. 2025년 KRF 주요 지원 분야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 · 평가 (계속)

-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요약

삶의 질 정책 4대 부문 (4차 기본계획 기준)	기본평가				심층평가 전문가 주요 의견
	우수	보통	개선필요	핵심과제(100점 만점)	
보건·복지(46개)	16개	30개	0개	5개 (82.7점)	인프라 확충 등 전반적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기여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주민 참여 및 타 사업 연계 노력 미흡
교육·문화(22개)	5개	16개	1개	4개 (64.2점)	주민역량 강화 및 문화 향유 기반 제공에 기여 성과지표 보완, 사업 추진 시 지역 불균형 문제 등 고려 필요
정주생활기반(66개)	8개	57개	1개	8개 (61.7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높음 주민 참여 기회 확대 등 정책 효과 제고 노력 필요
경제·일자리(41개)	12개	29개	0개	6개 (85.0점)	정책 참여자 의견수렴 및 타 사업 연계 등 성과 제고 노력 이행 사업의 경기효과 및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성과지표 보완 필요
전체 평균	88.6점		—	72.8점	
대상 과제 수	175개		23개	—	

※ 제4차 기본계획 178개 과제 중 종료사업 23개, 지방이양 사업 5개 등을 제외하고, 25개 신규 과제를 평가대상에 포함
※ 기본평가: 우수(95점 이상), 보통(70~94점), 개선필요(70점 미만)

3. 2025년 KRF 주요 지원 분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 평가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별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관리
- 139개 농어촌 시(57개)·군(82개)에 대한 목표 달성을 점검·분석하고(상반기), 위원회에 보고(6월)
 - 결과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개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자체에 통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구성: ('11) 31개 항목 → ('13) 32개 항목 → ('15) 17개 항목 → ('21) 19개 항목 → 현재 5차 기본계획을 반영한 개편 진행 중

〈 제4차 기본계획 기준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6개)	목표(10개)
보건·복지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 교육, 노인복지
교육·문화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채육시설
정주여건	주택, 상수도, 하수도, 난방,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경제활동	창업·취업 컨설팅 및 교육

※ 파란색은 접근성 측정 항목(6개): 자가 차량을 이용한 이동 소요시간 측정

3. 2025년 KRF 주요 지원 성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 평가 (계속)

주요 점검 결과('24년 기준)

- 4대 부문 19개 항목 중, 15개 항목의 목표수준 달성 (미달성 항목 4개)
- 달성 추이: '22년 12개 → '23년 14개 → '24년 15개

보건 복지		전 항목 목표수준 달성			교육·문화		전 항목 목표수준 달성		
항목	목표치	'22년	'23년	'24년	항목	목표치	'22년	'23년	'24년
진료	30분~1시간 ↓	23.1분	22.7분	22.7분	초·중등교육	10분 ↓	7.4분	7.3분	7.5분
응급의료	30분 ↓	13.8분	12.1분	11.6분	평생교육	70% ↑	83.5%	85.6%	85.8%
영유아보육교육	20분 ↓	9.1분	9.1분	9.2분	문화	40분 ↓	24.1분	24.0분	23.9분
노인복지	80% ↑	100%	100%	100%	도서관	10분 ↓	10.0분	9.7분	9.6분
					체육시설	30분 ↓	16.6분	15.8분	15.6분

3. 2025년 KRF 주요 지원 성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 평가 (계속)

주요 점검 결과('24년 기준)

정주여건		4개 항목 목표수준 미달성			경제활동		전 항목 목표수준 달성		
항목	목표치	'22년	'23년	'24년	항목	목표치	'22년	'23년	'24년
주택	23% ↑	34.8%	38.4%	41.6%	창업 취업	86% ↑	77.5%	87.1%	95.0%
상수도	85% ↑	81.6%	82.8%	83.5%	컨설팅 교육	(연 1회 이상)			
하수도	76% ↑	75.6%	76.6%	77.5%					
난방	68% ↑	70.0%	72.7%	73.3%					
대중교통	100% (일 3회 이상)	89.1%	89.2%	89.2%					
생활폐기물	100% (마을 내)	(영농)76.6% (생활)20.6%	80.7% 26.7%	80.9% 30.1%					
방범설비	60% ↑	75.9%	75.4%	82.2%					
경찰순찰	100%	95.4%	98.2%	97.1%					
소방출동	70%	69.1%	58.4%	73.7%					

3. 2025년 KPI 주요 지원 분야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 정부 부처의 계획·정책·사업 등이 농어촌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평가하여 점검·보완하도록 조치하는 정책조정 제도

2025년 영향평가 주제 선정 결과

주제	평가 목적	주요 내용	관련 부처	평가 수행
고령자 주거복지	▶ (평가 목적) 도·농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	▶ (주요 내용)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추진 실태 및 농어촌 측면 한계 파악, 개선과제 도출	▶ (관련 부처) 국토부	▶ (평가 수행) KREI
농어촌 식품사마	▶ (평가 목적) 농어촌 식품사마 최소화	▶ (주요 내용) 농어촌 식품사마 현황 파악, 관련 정책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관련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 (평가 수행) KMI

3. 2025년 KPI 주요 지원 분야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예속)

2024년 영향평가 수행 결과

주제	평가 목적	주요 내용	관련 부처	평가 수행
농어촌 유휴시설	▶ (평가 목적) 농어촌 유휴시설 활용사업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 (평가 배경)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유휴시설 활용률 저하 및 방치 증가	▶ (평가 결과) 사업 기획단계에서 타당성 검토 강화, 재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체계 마련, 유휴시설 활용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터부처 사업 연계 도모 등	▶ (평가 수행) KREI·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지털 정보격차	▶ (평가 목적) 농어촌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파악 및 정책과제 탐색	▶ (평가 배경) 경제·사회 전 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추세에도 농어촌은 열악한 인프라, 낮은 접근성 등으로 디지털 정보격차 심화	▶ (평가 결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정책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지표 개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등 필요	▶ (평가 수행) KMI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 2012년부터 매년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측정하고 도시민과 비교·분석
- 삶의 질 향상 정책 성과 측정, 삶의 질 향상 정책 아젠다 발굴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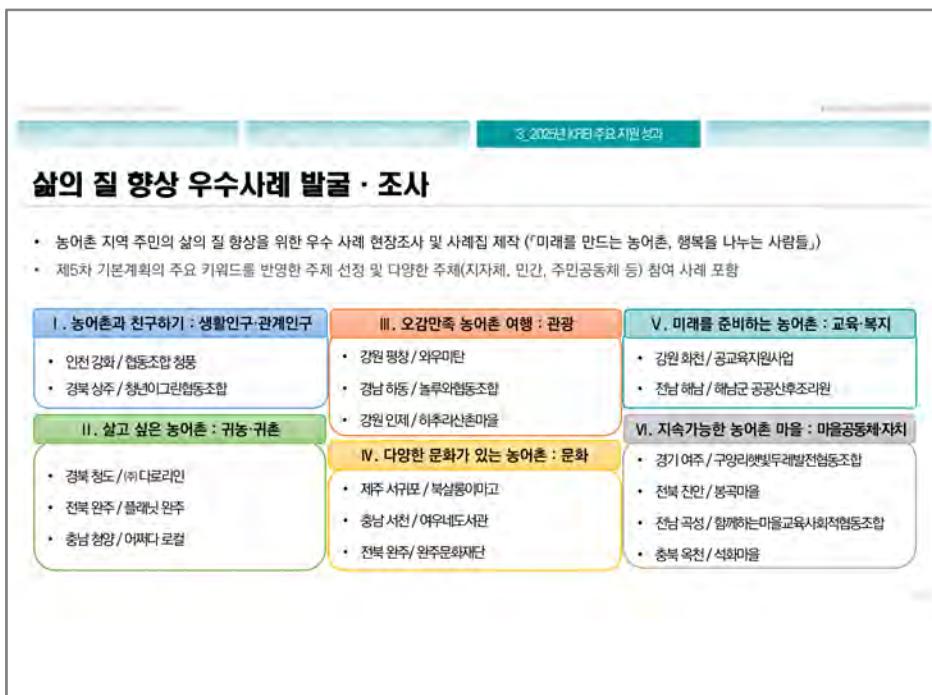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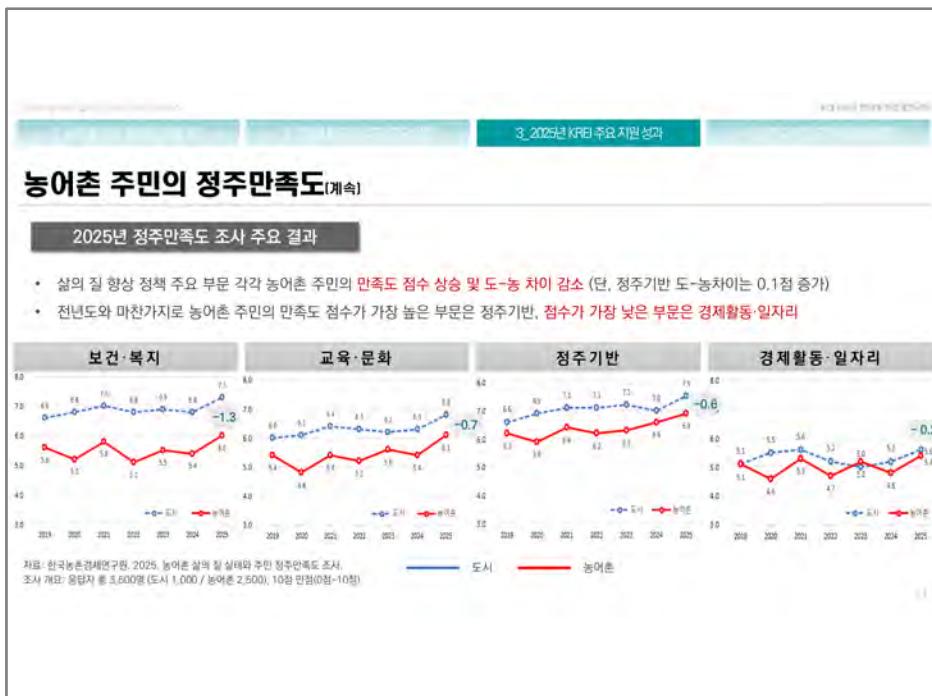
조사 대상 / 기간	•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2025년 10월 1일 ~ 11월 7일
표본 수	• 총 3,500명 (도시(동) 1,000명, 농어촌(읍·면) 2,500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1.66\% \text{ Point}$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방문 면접 조사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계속)

2025년 정주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거주 지역 생활에 대한 만족감·소속감·활동 참여도 모두 농어촌 주민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거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농어촌 주민이 더 낮고, 도시민과의 격차도 증가





4_ 향후 과제 및 2026년 활동 방향

KREI

4. 향후 과제 및 2026년 활동 방향

향후 과제 및 2026년 활동 방향

▶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점검·이행 및 취약지역 컨설팅 추진 지원

- 5차 기본계획을 반영해 개편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점검·분석 지원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점검·평가를 통한 취약지역 도출·선정 과정 지원
- 취약지역의 개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도 준비·시행 지원

▶ 농어촌 영향평가 및 사전협의제 이행 실효성 증진

- 농어촌 영향평가 및 사전협의제 결과 및 이행 상황에 대한 위원회 점검·보고 지원
- 해당 사업 소관 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개선 방안의 환류 가능성 제고

▶ 현장 중심의 삶의 질 네트워크 운영 강화

- (가칭)삶의질리포터 구축 및 상시 운영으로 농어촌 삶의 질 관련 현장 목소리 적시 수렴 및 환류
- 지역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농어촌 지역 현안을 반영한 삶의 질 정책 아젠다 지속 발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정책 관계자와의 협업 네트워크 확장으로 정책 기획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생산 촉진

감사합니다.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I. 주제 발표



주제 1

농촌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 과제

박 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차

1. 생활인구 개념과 정책 동향
2. 생활인구 현황
3.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
4. 주요 정책 과제



농촌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 과제

연구책임자: 박형호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진: 이순미 부연구위원

김부영 전문연구원

CONTENTS

1. 생활인구 개념과 정책 동향
2. 생활인구 현황
3.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
4. 주요 정책 과제

01 생활인구 개념과 정책 동향



01. 생활인구 개념과 정책 동향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 '생활인구'가 지역의 소비 및 체류 활동을 측정하는 경제적·통계적 개념이라면, '관계인구'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관계적 개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외국인등록인구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체류인구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일무,
경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생활인구

1. 통계적 집단
2. 통신 모바일 데이터,
신용카드 매출액 데이터
3.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오다기리 토쿠미(小田切徳美, 2017):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관심'과 실천적 태도의
'관여'가 반복되어 '관계'가 형성

일본 국토교통성(2021): 이주나 관광도 아니고 단순한 귀성도 아닌 일상 생활권이나
종근린 이외의 특정 지역과 계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관계되어 지역의 관계 해결에
이바지하는 사람 등

사쿠노 히로카즈(作野広和, 2019): 경주인구를 보완하는 양적 측면과 정주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도농관계론적 기능('로컬이노베이션')

관계인구

1. 지역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파트너'
2. 경제적인 '인적 자본'

01. 생활인구 개념과 정책 동향

국내 생활인구 관련 정책

-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 지원이 정책의 핵심 동력, 여러 정부부처에서 '체류'를 유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물리적 인프라 조성에 치중**

○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년)

- 3대 전략: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 추진과제: 생활인구 제도 확립, 지역 이주 및 체류 활성화,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리지역에 배분
- 기초지자체: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최대 144억 원까지 차등 배분
- 광역지자체: 지역의 인구·재정 여건,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생활인구 주요 정책		
구분	사업명	부처
제1차 사업 조성	농촌 체류형 농업단지 조성 사업, 농촌스포츠대장 만집체육사업	농식품부
	고향돌봄	경인부
방한·체류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조성화	시골언니 프로젝트, 농촌관계인구 협성 지원	농식품부
	지역관광주간조직(DMO) 육성 지원, 관광도시 조성, 디지털 관광주제화	문화부
정책·경주 유도	회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청년마을 만들기	농식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인부

01. 생활인구 개념과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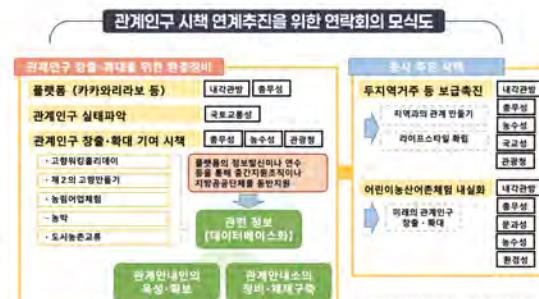
일본 관계인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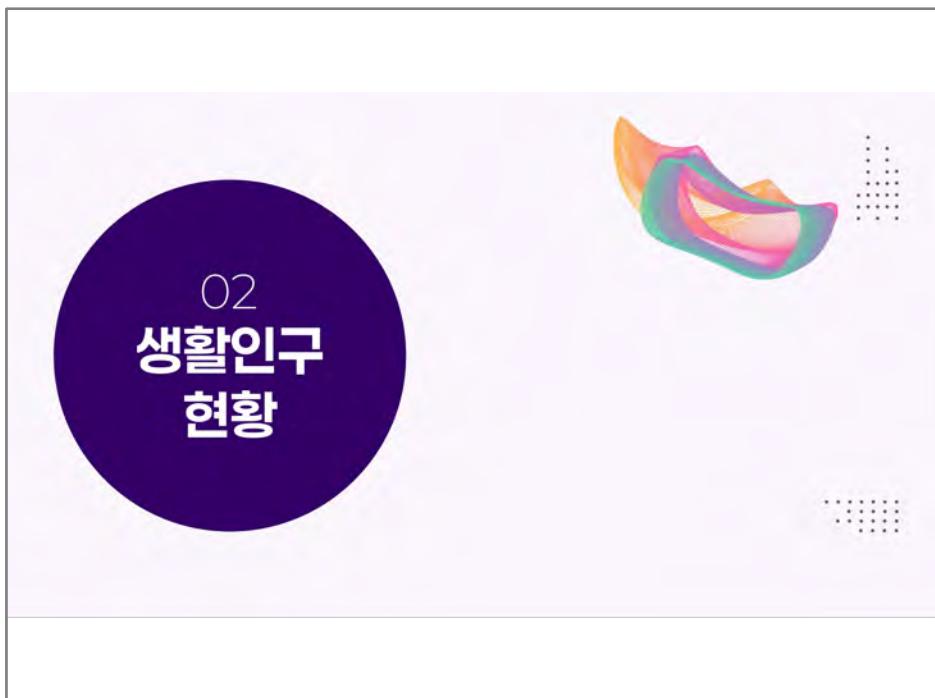
중간지원조직의 핵심적 역할

- '카카와리라보'(내각부)는 전국의 중간지원조직, 민간기업,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민연계 플랫폼으로, 정보 공유, 네트워킹, 아이디어 교환 기능
-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대류촉진 사업'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

체계적인 단계별 심화 프로그램

- '지역활성화 협력대'(총무성)는 도시 청년이 1~3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지역협력활동에 종사하도록 보수와 활동비를 지원
- 단순 방문객을 지역의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는 체계적인 '스텝업(Step-up)' 프로그램 운영





02. 생활인구 현황

1. 생활인구 규모

주민등록인구 지속 하락, 생활인구 월별 큰 격차

체류인구

- 2024년 8월 3,362만 명(5.9배), 2025년 2월 2,022만 명(3.2배)
-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1.2배 많고, 60대 이상이 가장 많지만, 체류인구 배수로는 40대(7.0배)와 30대(6.9배)가 가장 큽니다.

월별 생활인구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2024년 대비 2025년 생활/주민등록인구 증가 시군구 (단위: 명)

지역	생활인구 증가			주민등록인구 증가			
	생활	체류	주민	지역	생활	체류	주민
고성군	20,261	20,512	-415	가평군	-30,461	-30,675	82
양평군	8,941	9,062	-195	안동시	1,075	829	69
화천군	1,230	1,425	-215	강화군	-33,089	-33,734	496
안동시	1,075	829	69	신안군	-8,635	-9,520	326
봉평군	2,480	2,886	-426	밀양군	-17,210	-18,022	745
부산 북구	72,308	73,909	-1,728	순창군	-16,051	-16,132	21
광주시	1,353	1,973	-1,057	예산군	-42,730	-43,900	680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 증가 시군구는 각 7곳 뿐

생활인구 증가 시군구는 모두 체류인구 증가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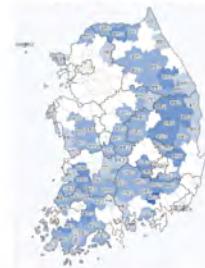
- 주민등록인구 1% 증가 → 생활인구 0.17% ↑
- 체류인구 1% 증가 → 생활인구 0.83% ↑
- 주민등록인구 변이계수 평균 13.5
- 체류인구 변이계수 평균 100.8

안동시만이 유일하게 생활인구 및 주민등록인구 모두 증가

02. 생활인구 현황

2. 생활인구 활동 특성

평균 재방문율



평균 체류일수



평균 체류시간



02. 생활인구 현황

3. 생활인구 유입 특성

안동시 유입 특성



평창군 유입 특성



02. 생활인구 현황

4. 생활인구 소비 특성

체류인구 신용카드 사용액은 월별 지역별 큰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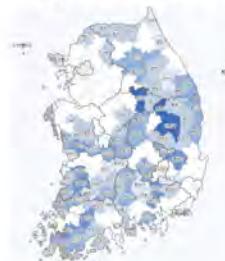
- '25년 2월, '24년 12월 인당 신용카드 사용액 많음

- 연말연시, 명절 기간에 많은 인당 신용카드 사용액을 나타냄

- 충북, 경북이 인당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음

- 충북 128천원, 경북 126천원으로 전 기간 인구감소지역 평균 상회

신용카드 사용 특성



시도별 체류인구의 월평균 인당 신용카드 사용액 추이 (단위: 천원)



03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

03.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

생활인구 경제적 효과

생활인구 1인당 월평균 카드사용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OLS	임의효과	고정효과
Ln_체류인구	-0.0703*** (-4.00)	0.0709*** (4.47)	0.0764** (3.13)
Ln_동록인구	0.2445*** (12.85)	0.1459*** (3.88)	0.0157 (1.13)
재방문율	0.0022* (2.15)	0.0051*** (6.67)	0.0043*** (3.56)
평균체류시간	0.0261*** (5.05)	0.0887*** (13.16)	0.1024*** (9.49)
Adj_R ²	0.3486		
Overall R ²		0.3096	
Within R ²			0.3559
관측자 수	972	972	972

※ *** p < 0.001, ** p < 0.01, * p < 0.05

✓ 생활인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양(+)의 효과

● 임의효과 모형 결과

- 체류인구 1% 증가 → 인당 월평균 카드 소비액 0.07%
- 동록인구 1% 증가 → 인당 월평균 카드 소비액 0.15%
- 재방문율 1%p 증가 → 인당 월평균 카드 소비액 0.51%
- 평균체류시간 1시간 증가 → 인당 월평균 카드 소비액 8.87%

● 고정효과 모형 결과

- 체류인구 1% 증가 → 인당 월평균 카드 소비액 0.08%
- 재방문율 1%p 증가 → 인당 월평균 카드 소비액 0.43%
- 평균체류시간 1시간 증가 → 인당 월평균 카드 소비액 10.24%

○ 생활인구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대가 더 큰 영향

- 규모가 큰 체류인구의 증가보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의 효과가 더 큼
- 인구 규모보다는 재방문율, 평균체류시간이 더 큰 효과를 나타냄
- 따라서, 기초생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정주인구의 확보, 그리고 지역 내 소비 컨텐츠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관계인구 확보도 중요함

03.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

면 주민 생활인구 수용성

✓ 면 지역 주민들의 외지와의 접촉이 매우 부족

○ 외지인과 교류 경험 없음이 67.6%

- 친인척·지인(67.6%), 경제활동(14.3%), 여가·휴양(13.4%)

○ 단지역 체류 경험 없음이 81.2%

- 여가·휴양(41.3%)과 친인척·지인(37.7%) 방문

✓ 정책목표와 주민 기대 간의 명확한 인식격차 존재

○ 지역 방문·체류 외지인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 지역방문 외지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77.8%), 중립(19.5%)
- ‘환경훼손’과 ‘지역 가치관 훼손’에 대한 우려 존재
- 농업인(63.1%), 40/50대 남성(40.0%)의 방문 선호
- 외지 방문객을 ‘지역 파트너’가 아닌 ‘소비자’로 인식

○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외지인에 대한 인식은 외지인에 대한 기대감, 외지인과의 교류경험 지역 어려움에 대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
- 외지인에게 아주 경우 의향은 외지인에 대한 기대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정기적 방문 활동 경우 의향은 외지인에 대한 기대감, 외지인과의 교류경험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농촌주민들은 ‘아주(정주)’를 ‘방문(체류)’보다 선호하며, 생활인구 유입에 대해 ‘인프라 개선’과 ‘인구증가’를 기대

03.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

상주 두 지역 살기 사업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사업(2024~2025)

○ 청년 도시민 대상 정주체험 프로그램

- 탐색캠프(2박3일), 테마캠프(2박3일), 지역연계 프로젝트 활동(9박10일) 등

○ 경상북도와 상주시 예산 매칭(총 10억 원)

- 운영 조직(상주다음사회적협동조합)이 관계인내소 역할 수행

'한달살리' 플랫폼의 '상주 두 지역 살기' 모집 게시물



참가 대상으로 구분한 생활인구 유형별 규모(단위: %)



참가动机: 농촌과의 관계 인식 유형

▶ 청년 세대의 가치관 부응,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중요

○ 핵심 관계인구: ① 삶의 전환, 새로운 삶의 가능성 탐색,

② 하고 있거나 하려는 일에 도움 얻기

○ 광의적 관계인구: ③ 변화 등으로 인한 회복과 재충전,

④ 상주 혹은 로컬(지방과 농촌) 경험

○ 농촌 무관: ⑤ 추억과 경험 쌓기

03.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

청년마을

달빛포레스트(전남 영암)

○ 생태환경을 주제로 청년과 지역을 잇다!

- 지역생태계 탐험의 기회 제공
-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일거리 실험 진행



전체차랩(전남 보성)

○ 녹차를 주제로 한 청년 창업 실험마을

- 다원 탐방, 다례 체험, 차 인문학 강의 등
- '숙박비는 재능으로 받겠습니다'(재능 기부)



뭐하농하우스(충북 괴산)

○ 농업 기반 농크리에이터 생태계 구축

- F&B 공간(뭐하농하우스), 공유 창작 오피스, 농작업 실습장, 공유생산공간 결합
- 농게더링 포럼 개최



04 주요 정책 과제



04. 주요 정책 과제 – 정책 방향

양적 확대에서 '질적 심화'로의 전환

- 일회성 방문객에서 '팬(fan)'으로, '팬'을 '핵심 파트너'로 발전
- 방문객 수 보다는 재방문율과 평균 체류시간이 더 큰 효과
- 피상적 접촉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 관계가 중요
- 지역 체험 프로그램, 워케이션,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 등 강화

'소비자'에서 '지역 파트너'로서의 재정립

- ‘무엇을 줄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설계
- 주민들은 아직 방문객을 ‘소비자’로만 인식
- 청년마을, 살아보기에서 생활인구의 사회적 활력 기여 시례
- ‘파트너십’을 통해 생활인구에겐 의미 있는 활동 기회 제공, 주민에겐 실질적 혜택 공유로 ‘주민 수용성’ 제고

'관계' 중심의 정책 기반 조성

- 관계 발굴·심화·관리하는 중간지원조직 육성·지원
- 관계안내소 및 관계안내인 기능이 생활인구와 주민간 가교 역할
- 일본은 '카카와리리바보'를 통해 NPO 육성·지원 전략
-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의 '현대 풍토' 조성, '광의의 관계인구'가 '핵심관계인구'로 성장 유도

데이터 기반 통합적·맞춤형 정책 설계

- 통신·소비 등 빅데이터의 효과적 정책 활용을 위한 고도화 필요
- 통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 또는 '생활권'으로 세분화
- 방문 등기에 따른 생활인구 유형화 및 맞춤형 정책 제공 필요
- 교부세 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표로 생활인구 통계 사용

04. 주요 정책 과제 – 세부 과제

‘관계인구’의 제도화 및 인재 활용

‘관계인구’ 개념의 법제화

‘생활인구 등록제’,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 ‘생활주민’ 등록 시 공공시설 할인 등 제공,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연동으로 ‘기반한 혜택’ 제공

인재 활용 시스템 구축

‘지역 인재 DB 플랫폼’, ‘관계시민증’ 구축 및 ‘지역 활성화 포인트’, ‘정책 참여 인증서’ 수여

지역에 파견되는 관계인구를 ‘준공무원형 지역인재’로 인정·관리·지원 검토

농촌에서의 삶과 자신의 본업을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필요 ex) ‘반농반خ’

04. 주요 정책 과제 – 세부 과제

공간·거점 기반 체류형·순환형 생활인구 정책

유휴시설 활용 관련 규제 완화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인구와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거점 설립

- 복합거점을 중심으로 체류·소비·교류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

- 각종 법적 규제를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규제 샌드박스’ 또는 ‘포괄적 특례’ 등을 통해 유연하게 해결

마을법인 기반 농어촌 민박, 체험마을 등 개별 사업단위를 통합 운영하는 모델 도입 필요

시설의 ‘자산화’ 접근 검토

농촌판 전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차를 통한 ‘시설활용’에서 운영 주체의 ‘자산화’ 지원 검토

04. 주요 정책 과제 – 세부 과제

민관협력 기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지속적 관계망 확립

중간지원조직 육성

'관계안내인'의 제도적 육성

- 상주시 살아보기 사례: 지역의 '한대통로' 조성, 도시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지역 자원과 연결하는 '사회적 협착체' 역할 수행

민간 주도 생태계 지원

'소비자'가 아닌 '지역 파트너'로의 인식 전환

○ 주민들이 생활인구를 '정책 지원 수혜 경쟁자'가 아닌 지역 활성화의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하는 홍보 필요

○ 상생 프로그램 발굴 ex)전체차량 '숙박비는 재능으로 받겠습니다'

04. 주요 정책 과제 – 세부 과제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정책 고도화

데이터 정교화 및 고도화

통계 단위를 읍면동 또는 실 생활권으로 세분화

- 또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데이터도 단위로 공표하여 지역 간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이동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데이터'를 결합하여 '동기 기반 생활인구 유형'별 정책 설계

데이터 활용처 명확화

○ 수집된 데이터를 실제 행정·재정 지원 배분과 연계 필요

- '보통교부세' 신장,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생활인구 유치 활성화 및 성과를 핵심 지표로 활용

○ 지자체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요 예측에 생활인구 통계 사용 제도화 도입



감사합니다

주제 2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사회연구실 실장

목차

1.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2.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3.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방향



I 재생에너지와 정책 방향

❖ 재생에너지 정책과 어촌 재생에너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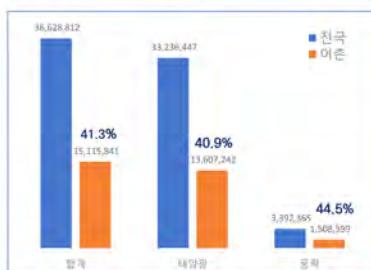


3

I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 어촌의 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어촌지역 생산(2023년 기준)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어촌 지역별 생산(2023년 기준)



4

I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어촌의 재생에너지 전망



5

II 어촌 에너지 자립 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이란?

- ✓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외부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마을공동체
- ✓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가속 및 RE100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부각

에너지 자립마을의 효과

- ✓ 마을의 에너지 비용(난방, 전기료 등) 절감
- ✓ 에너지 생산, 관련 서비스업(교육, 관광 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감소

6

II 어촌 에너지 자립 마을

❖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유형



에너지 자급형

- 마을의 에너지 일부 또는 전체 생산 (태양광, 풍력, 디젤 헤열발전)
- 소규모분산식 발전



수익 창출형(지역형)

- 대규모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 및 지역 복지사업에 투자 (이익공유)
- 대규모·집적화 발전



수익 창출형(마을형)

- 일정규모(유류부지, 공공부지 등)의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수익을 마을발전·복지사업 등에 투자

7

II 어촌 에너지 자립 마을

❖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기존)

홍성 죽도



- 발전규모 : 태양광 201KW, 풍력 10KW
- 에너지저장장치(ESS) : 900KW
- 예산 : 총 25억원(한화 60%, 국비 30%, 지자체 10%)
- 에너지 자립률 : 평균 70%(나머지 디젤)

↳ 관광객증가로 에너지 자립률 하락 → 디젤발전 ↑
→ 태양광 신규설치 고려(주택)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마을(2015~)

제주 가파도



- 발전규모 : 태양광 174KW, 풍력 500KW
- 에너지저장장치(ESS) : 3.86MW
- 예산 : 총 143억원
(한전 50%, 국비 10%, 지자체 30%, 자부담 10%)
- 에너지 자립률 : 평균 70%(나머지 디젤)

↳ 풍력발전기 고장(국외산) → 2020년 철거
→ 신규 사업 추진(220억, 풍력(2.3~4.2MW), 태양광(249KW))

8

II 어촌 에너지 자립 마을

❖ 기존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한계



9

II 어촌 에너지 자립 마을

❖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변화 (신안군 사례)

규모화·집적화 및 이익공유 추진

- 마을단위를 넘어서 지역단위 규모로 재생에너지 발전규모 확대
-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발전 수익에 대한 권리 확보(설별 협동조합 구성)
- 지역주민에게 발전수익의 이익을 배분하는 '햇빛연금', '햇빛아동수당' 추진
- 부담 없는 투자와 수익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사업동력 확보

주민 수익 배분 흐름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자료 : 한국일보, '폐염전의 재발견…연 최고 820만원 '태양광 연금' 받은 신안 주민들, 2021.04.26'

10

II 어촌 에너지 자립 마을

❖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변화 (신안군 사례, 태양광)



사업추진 중

11

II 어촌 에너지 자립 마을

❖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변화 (신안군 사례, 해상풍력)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역	발전규모	총사업비 (추정)	사업종료
전라남도 신안군	3.2GW	19조 원	203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고창군	1.4GW	6조 원	203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1.02GW	10조 원	2031
인천광역시 옹진군	1.0GW	8.76조 원	2037
충청남도 태안군	1.4GW	11.6조 원	2033
충청남도 보령시	1.3GW	11.6조 원	2033
전라남도 진도군	3.6GW	22조 원	2033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 동쪽)	0.44GW	2.5조 원	2032
전라남도 여수시	6GW	54조 원	2032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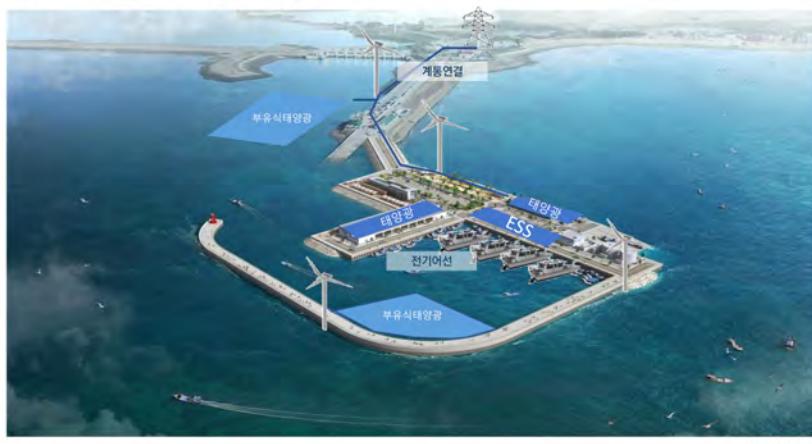


12

III 어촌 에너지 자립 마을 방향



❖ 재생에너지 기반 어항개발 및 어촌연계



안산 방아마리항

13

III 어촌 에너지 자립 마을 방향

❖ 주민주도 에너지 자립 어촌마을을 조성을 위한 개성방안

디젤발전 재생에너지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자급형 섬지역의 경우 디젤발전소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자급률을 상향 추진 ▪ 2024년 기준 56개 섬지역 디젤발전기 이용 중(1년 정부 지원금 1,700억원)
재생에너지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C(대규모단지), 한국전력(섬지역)이 직접 운영·관리를 총괄 ▪ 단, 섬지역은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시 정부투자 비중 상향을 통해 한전의 투자 유도하여 발전시설 소유와 운영을 일원화
ESS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량의 ESS 시설 확충 필요 ▪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저녁시간 대 전기 생산이 불가능 낮에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이전에 이용가능하기 위한 ESS 시설 확충 추진 (발전 설비용량의 3배 정도의 ESS 시설 필요, 현재는 1배 미만)
이익공유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는 이익공유가 전제되어야 지속가능성 확보 ▪ 발전 수익의 분배와 더불어 취약계층 지원, 복지사업투자, 청년 일자리 교육 등에 투자 (사례: 신안군 신안신재생에너지 복지재단) ▪ 수익창출형(마을규모)의 경우 마을 공동체 서비스 확대에 중점
계통연계 지속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단지의 발전 계통연계시 전력이 부족한 섬·어촌지역 전력 계통 연계를 통해 어촌마을의 자급률을 상향 추진

14

III 어촌 에너지 자립 마을 방향

❖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유형별 추진방향



15

감사합니다.!!

III. 사례 발표



사례 1

농촌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일

서동선 협동조합 품앤디 대표

목차

1. 어떻게 하면
2. 현재와 미래
3. 함께 걸어가면

팜엔디협동조합

농촌 미래의 씨앗을 심는
RUSTIC TOWN

농촌 소멸
지역 소멸
인구 소멸

농촌은 []





관점의 변화

가치관과 소비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거시적 관점에서 인구 감소와 쇠퇴 지역의 발전은 도시와 지방 간 '인구 자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경제 일변도의 가치관 대신 다양한 사상과 이념이 중요해집니다.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글로벌화하면서 지방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이 깊어지고 라이프스타일, 노동 방식, 가치관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지역 경제라고 하면 지역 자원 활용, 기업 유치, 고용 창출 등의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관과 소비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상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실현하는 장소'로 지역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뉴로컬한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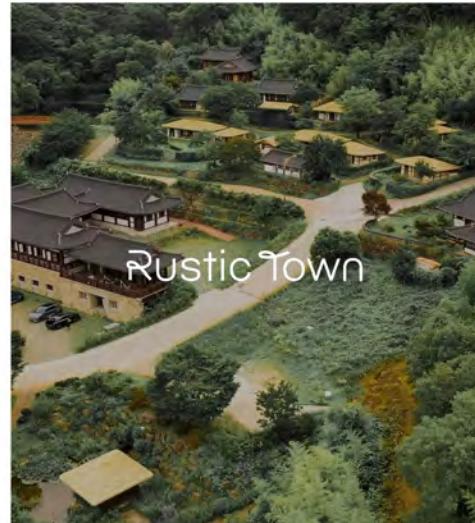
수혜자, 대상자의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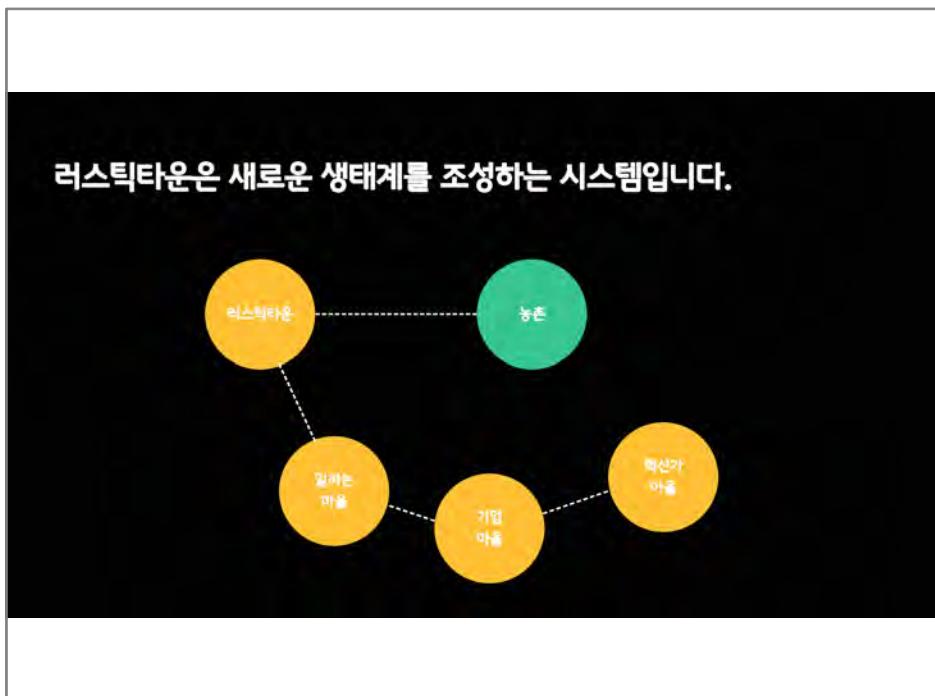
“사람이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닌,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건 모든 업무가 가능해지는, 기존 상식을 넘어서는 플랫한 관계가 지역에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산업이 돼 경제를 순환시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사람이 빨리 들어가고 있는지가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뉴로컬한 현상입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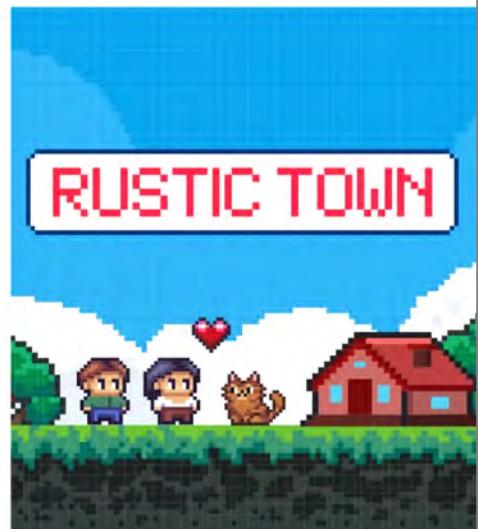
어떻게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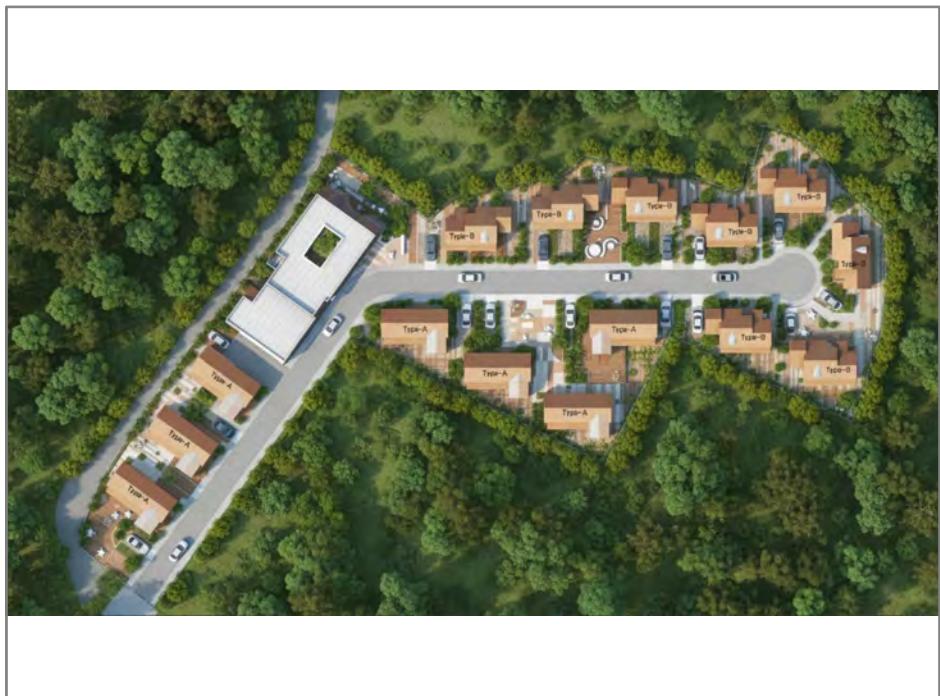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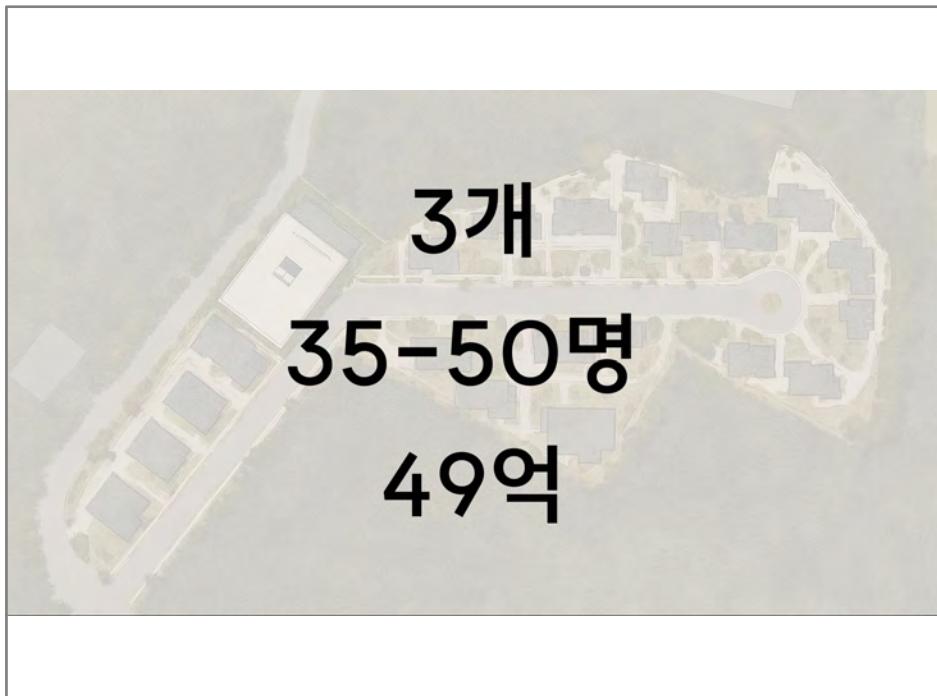


02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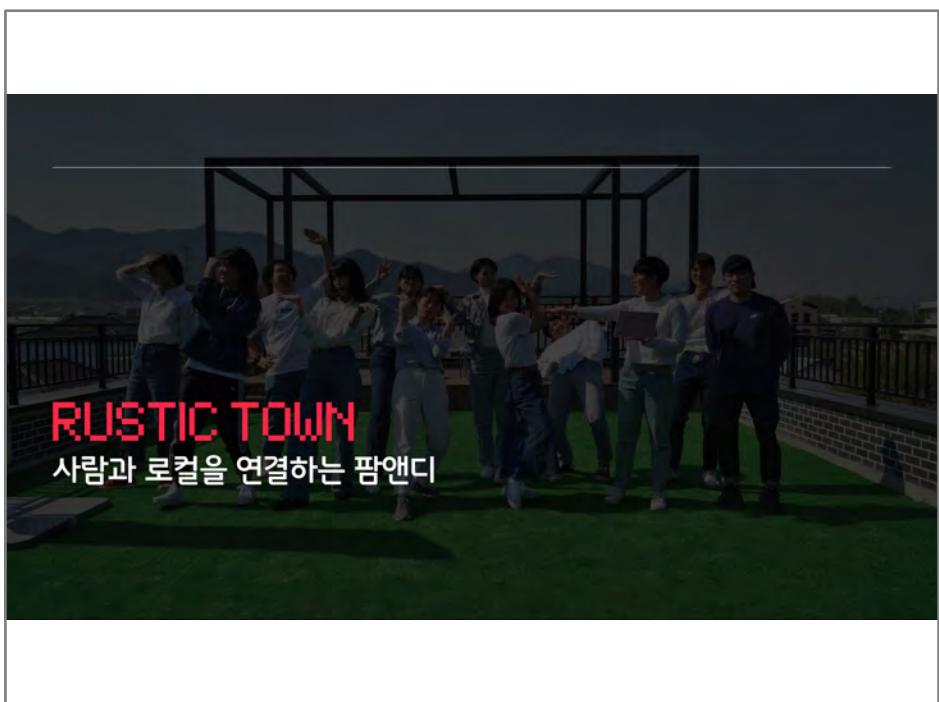


와글와글곡성
50개
3회
20억+
일하기 좋은 곳.



03

함께 걸어가면,



RUSTIC TOWN

사람과 로컬을 연결하는 팜앤디

사례 2

위기 속에서 찾은 희망: 구양리 태양광 발전소 이야기

전주영 경기도 여주 구양리 이장

목차

1. 마을 소개
2. 추진 배경
3. 마을 태양광 발전소의 현황
4. 마을 태양광 발전소로 누리는 행복
5. 지속가능한 희망
6. 결론과 제안

위기속에서 찾은 희망

마을주민이 주인인 구양리 태양광 발전소 이야기

발표 목차

1. 마을 소개
2. 추진 배경
3. 마을 태양광 발전소의 현황
4. 마을 태양광 발전소로 누리는 행복
5. 지속가능한 희망
6. 결론과 제안

1. 구양리 마을 소개

1) 구양리 마을 (큰말·작은말, 70여가구, 120여명)



2) 농업용 시설 보유 현황

(참고 4동, 건조기 4대, 콤바인 2대, 지게차 2대, 트랙터 1대, 이앙기 1대, 일괄 파종기, 고추세적기, 각종 작업기)





2. 태양광 발전소 추진 배경

1) 2050 탄소중립 정부 안 (2021년 12월 발표 확정안)

구 분	내 용
화석 연료 감축	석탄 'LNG 완전 퇴출'
원자력	유지 (기존 원전 운영 지속)
재생에너지 비중	70.8%
원자력 비중	21.8%
총 발전설비 추정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551GW~672GW (2050년 기준)
태양광 설비 목표	275GW~336GW (총 발전 설비의 50% 이상)

2) 태양광 설치 가능한 비농지 잠재 용량 (지붕, 유휴지 등, 광GPT 추산)

구 분	잠재 용량
건물 지붕 (주택, 공장, 상가 등) 제약: 건물 노후화, 지붕 연작 제한, 주민 민원, 건축물 안전기준 등	20 ~ 30 GW
도로·철도 등 인프라 (고속도로 방음벽, 휴게소, 터널 위 등) 제약: 공공시설 안전기준, 일사량, 경제성	1 ~ 5 GW
국공유 유휴지 (하천부지, 폐공, 염해지, 산업단지 등) 예: 폐업 전 태양광, 산업단지 내 유휴지 활용 등	5 ~ 10 GW
수상 태양광 (댐, 저수지, 호수 등) 제약: 환경성 논란, 수질 문제, 주민 반발 등	5 ~ 10 GW
총 합계	최대 약 40 ~ 55 GW

3) 농지로 올 수 밖에 없는 태양광 발전 용량 (필요한 태양광 발전용량의 72%이상)

구 분	용 량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태양광 발전 용량	300 GW
비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발전 용량	최대 40 ~ 55 GW (13~18%)
농지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발전 용량	245~260GW (81~86%)

4) 필요한 농지 면적 (2024년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2020농림축산부 보도자료 필요면적 참조)

구 분	100KW 설치 면적	1MW 설치 면적	1GW 설치 면적	250 GW 설치 면적	전체 농지면적의 (150만4천 ha)
일반형	0.13ha(400평)	1.32ha(4,000평)	1,322ha	33만ha	22%
영농형	0.23ha(700평)	2.31만ha(7,000평)	2,314ha	58만ha	39%

5)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 기준 태양광발전 잠재량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① 태양광발전 잠재량 연산량 (시장 잠재량 369GW)

분류	이론적	기술적	시장
단위 : (GW)	102,455	2,409	369

② 잠재량의 정의

이론적 잠재량	영토 전 면적에 입사되는 태양에너지로 환전히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
기술적 잠재량	설비요율 등 기술적 제약을 반영하고 지리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할 경우 활용 가능한 에너지 양
시장 잠재량	정부의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을 반영할 경우 활용 가능한 에너지 양

6) 반드시 가야 할 2050 탄소 중립의 길 농촌주민이 위험하다.

- ① 태양광 발전은 현실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
- ② 태양광 발전은 많은 자본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자본에 농촌주민이 밀려 날수밖에 없다.
- ③ 규제만 풀어서 탄소중립을 시급히 달성하려고 한다면 농촌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7) 2050 탄소중립의 길,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 ① 농촌주민이 태양광 발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 ② 농촌주택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것을 연결하여 하나의 발전소로 만들어 보자.【×
- ③ 마을자산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이 주인인 발전소를 만들어 보자.【○】

3. 구양리 태양광 발전소 현황

1) 마을 태양광 발전소 현황

햇빛농사로 마을연금을 만들어 농촌회생의 길을 여는 전국 최초의 1MW 마을공동체 발전소

- ❖ 설비 용량 : 998 [kW]
- ❖ 사업비 : 약 1,515 백만원
- ❖ 20년간 연평균 예상수익 : 약 1.2억원

구분	용량
(1호) 작은말 장고	76 kW
(2호) 큰말 장고	35 kW
(3호) 제육부지	131 kW
(4호) 뜬살구장 주차장	72 kW
(5호) 일반 부지(농지)1	204 kW
(6호) 일반 부지(농지)2	480 kW
합계	998 kW



2) 마을 태양광 발전소 전경 (1호기, 4호기)



4. 마을 태양광 발전소로 누리는 행복

1) 마을 사무실 운영 (사무장 채용)



2) 마을 미니 행복버스 운영



3) 마을 무료 식당 운영 (조리장 2명 채용. 노인 일자리 3명 활용)



4) 하우스 탁구장 , 그라운드 골프장 운영



5) 마을 여행, 추석 노래자랑, 설 육놀이 등 마을 행사



6) 초복 경로회원 외식



7) 말복 마을주민 외식



8) 태양광 발전소 · 도로변 제초작업



9) 백중맞이 마을 음악축제



10) 추석맞이 청·장년회 단합대회



11) 가을맞이 마을주민 단합 여행



12) 쓰레기 배출 · 영농 주민 교육



5. 지속 가능한 앞으로의 희망 (추진과정에서 얻은 구양리 마을의 희망)

- 1) 각 가정 지붕 및 택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냉난방 해결 (각 가정 10~20kw 설치)
- 2) 지산지소의 에너지 자립마을 실현 (스마트 이터기, ESS등 활용)
- 3) 농어촌공사 비축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영농형태양광 실증)
- 4) 전기트랙터, 전기콤바인, 태양광 발전 도정공장을 활용한 저탄소 농업실현
(저탄소 빨 브랜드화)
- 5) 고속도로 비탈사면 및 방음벽 태양광 설치 (마을복지 확대 및 기본소득 실현)

에너지 지산지소



2 MW - 에너지 자립마을

ESS, 에너지 지산지소로 전력 계통망을 해결



미야코지마 섬 300가구

VPP 가상발전소 운영
지붕에는 태양광! 마당에는 배터리!

영농형태양광은 농촌의 미래

영농형 태양광 100kw는 30년생 나무 475그루를 매년 심는 일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벼의 고온피해를 막고
과수의 냉해피해 막는다



전기 트랙터

자율주행 가능
70마력 8천9백 만원



마을정미소

태양광 정미소
재생 에너지 사용



저탄소 쌀

친환경 브랜드
탄소 배출권 판매

공공비축농지를 전체 농지의 5%로 늘리면 32.4GW 가능?

지역별 비축농지 면적 누계 (단위 ha)

합계	경기	경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576	2,442	748	956	3,425	2,356	2,254	2,207	1,158	30



현재 1만5천ha의 비축농지에 6.48GW 가능

- 전체농지의 1% 수준

비축농지를 전체농지의 5%로 늘리면

32.4GW 가능하다

(32,400개의 농촌마을에 1MW 영농형 태양광 가능)

☞ 2020년 기준 전국마을 37,563개의 86.2%

마을공동체라면 금융해결 가능하다 (수익권 담보대출)

건전성 흔들리는 '농협·수협'...부실채권 폭등에 외부
투자기관까지 접촉

국민금융지주, 농협·수협에 대출 규모 확장
국내외 투자자를 확장한 농협·수협에 대출 규모
증대방안 마련 예상



1. 농협 상호금융 부실채권 14조원

- '부동산 PF대출' 부실화

2. 태양광 대출은 매우 안전한 투자

- 태양광 대출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0.12%

- 2022년 7월 기업 대출 연체율 0.24%

공공비축농지를 전체 농지의 5%로 늘리면 32.4GW 가능?

지역별 비축농지 면적 누계 (단위 ha)									
합계	경기	경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576	2,442	748	956	3,425	2,356	2,254	2,207	1,158	30



NEWSIS

현재 1만5천ha의 비축농지에 6.48GW 가능

- 전체농지의 1% 수준
- 비축농지를 전체농지의 5%로 늘리면
- 32.4GW 가능하다

(32,400개의 농촌마을에 1MW 영농형 태양광 가능)

☞ 2020년 기준 전국마을 37,563개의 86.2%

6. 결론 및 제안 (추진과정에서 얻은 결론)

- 1) 재생에너지의 주인은 외부자본이 아니라 농촌 주민이어야 한다.
- 2) 재생에너지의 주인은 개인보다는 마을 공동체 이어야 한다.
- 3)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형태는 영농형 이어야 한다.
- 4)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저수지 등 공유자원을 이용하면 전국의 모든 마을이 태양광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제도개선, 수익권 담보대출 상품개발 등)
- 5) 지산지소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실현하면 전력계통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되어
 위기를 농촌희생의 기회로 만들자”

IV. 종합 토론



좌장: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

- 오늘 이 자리에서 일곱 분의 토론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컨퍼런스 주제는 '미래 성장공간, 기회의 땅: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새로운 희망이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개의 주제 발표, 그리고 두 개의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박형호 박사님 발표에서 여러 가지 생활인구의 가능성과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지점과 연관하여 사례 발표를 통해 곡성군의 팜앤디 대표로 계신 서동선 대표님께서 새로운 어떤 기회나 가능성 같은 것들을 또 우리한테 알려주셨고요. 그다음 주민주도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과 관련해서 이상규 실장님 발표하신 내용을 저희가 들었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구양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관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 주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토론을 필요로 합니다만, 오늘은 이 주제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숙제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이 자리는 KREI와 KMI 등 전문 지원기관이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 이걸 종합하면서 내년 이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발표 주제와 더불어서 향후에 우리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까지 두루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 Theta 제가 토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편들 대표로 계신 이정민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흥성군에서 실제 현장 업무도 하면서 현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고 계신 황바람 박사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론에 계시는 홍경진 부장님,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회 여러 가지 업무와 함께 연구도 같이 하고 계시는 김규호 박사님을 네 번째 토론자로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전문지원기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KMI 박상우 박사님께서 그다음, 그리고 이어서 KREI의 권인혜 박사님 토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얘기들을 종합해서 농식품부의 이아름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Circle 그리고 지정토론자분들의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들 말씀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편들 이정민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토론자: 이정민(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 대표)

- Circle 안녕하세요. 강진 청년 협동조합 편들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저는 강진과 연고가 없이 정착한 케이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30년 정도 서울에서 학교까지 나와서 생활을 하다가 네스트로컬이라는 서울시 사업으로 2020년에 강진을 처음 방문하고 귀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귀촌을 하게 되고 나서 사실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왜 강진으로 귀촌을 했냐’였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서 먼저 창업을 하고 문화예술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도 수상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던 친구가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뭔가 실패를 했거나 잘 안 풀렸을 거라는 이런 선입견들이 제가 내려갔을 당시에만 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귀촌을 할 때 아무런 생각이

없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새로운 기회가 한번 와봤으니 재미있게 즐겨봐야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1~2년 정도 시골에 살아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겠다,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갔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5년째 엉덩이를 붙이고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3년쯤 지났을 때 드는 생각이 저를 통해 사실 서울에서 놀러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려와서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가 왜 안 올라오는지 알겠다. 너무 사는 게 좋다.’ 그러면서 이제 집값도 알아보고 카페 같은 걸 하면 좋겠다면서 땅값도 알아보고 가는데 아무도 내려온 친구는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역에서 술 한 잔 마실 친구도 필요하고, 이제 조금 더 지역의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전남의 ‘청년마을 돌멩이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2년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대상은 문화예술 프리랜서로 한정을 지어서 모집을 했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도 고민 없이 내려왔던 것처럼 이 친구들도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고, 지역에서의 삶이 부가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졌을 때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정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에 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서울에서 문화예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집안의 뒷받침이나 이런 지원이 없으면 전시 한 번 할 때도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에서 예술을 한다는 건 너무나 많은 자본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작업에 전념하기보다는 강사를 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통해서 수입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역에 내려와 보니 너무 많은 공간들이 있고 전시를 하자고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너무 많고, 그리고 농촌이라는 낮은 인구 밀도와 풍부한 역사 자원, 자연환경들이 주는 것들이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청년 마을을 2년간 운영을 했고요. 외부에서 친구들이 유입되면서,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지만, 외부 친구들이 따로 논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 외부에서 청년들이 내려왔을 때 지역 주민들이 좀 환영도 해주고 커뮤니티에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어려운 지점이 명확히 있습니다. 외부에서 내려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농촌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의 장점이나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지역에 남아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패배자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똑똑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도시로 나간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중이고요. 여기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외부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사실 지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딩 사업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기준에 있는 지역 원주민들, 청년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두드러지게 뭔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지원이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지역도 많이 다니면서 느낀 부분인데, 누군가는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이 연결을 해준다는 게 한자리에 모아놓고 밥을 먹이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은 제 지역 강진에 ‘나아농’이라고 가업 2세 농촌 청년 농부 모임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농부입니다’라고 해서 가업 2세 농촌 청년 모임인데요. 제가 내려와서 알게 된 건데 농부들은 사업자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한들 소규모로 운영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하려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데, 저희가 상품 상표를 만들고 브랜딩을 해서 상품을 판매해 주고, 그 친구들이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역 원주민들이 외부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시너지를 내서 새롭게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정책적이나 시스템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도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좌장: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

○ 네, 고맙습니다. 아까 팜앤디 발표에서 나왔던 얘기와도 또 일맥상통하는 고민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가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내용들, 특히나 그 생활인구 발표에서도 이제 기존 주민들하고 좀 여러 가지 간극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그 부분이 앞으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도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고민해야 될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로 홍성군 황바람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토론자: 황바람(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

○ 안녕하십니까, 황바람입니다. 저는 충남 홍성군에서 왔고, 홍성군청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농촌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란 점을 감안해 저도 이런 현장, 그리고 이제 행정 지자체의 입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

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컨퍼런스 주제와 발표 분야를 보고 농촌 지역사회에 얹혀 있는,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이 정말 넓구나, 하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 오늘 생활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있었고, 에너지 자립 어촌 모델이나 청년 공동체 그리고 이제 햅빛 소득 마을, 에피소드 기반으로 한 구양리 사례 까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공통으로 떠올랐었던 생각은, 농촌의 미래를 고민함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라고 하는 단위에 얹혀 있는 사회·경제·환경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서 잘 연동되고 엮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방향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 두 번째로는 오늘 소개됐던 많은 사례나 내용을 볼 때 그렇다면 이 지역사회, 기초 자치 단체라고 둑여 있는 시·군 단위에서는 어떻게 체계를 짜고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좀 화두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홍성군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군청의 기획실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홍성군은 혁신 전략 담당관이라고 하는 실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친환경 농정 발전 기획단이라고 하는 TF팀 같은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 12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12년이 넘은 조직이고요. 저희가 민간에서 전문가 채용을 해서 농업 분야, 농촌 분야 이렇게 군정의 전제적인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체계 속에서 어쨌든 행정이 갖고 있는 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연계·협력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사해서 지금 메인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농촌 공간 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쪽을 공부하고 업무를 시작했을 때에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면 할수

록 진짜 이게 지역 사회 여러 가지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는, 정말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계획으로 묶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보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간 계획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병합하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모여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 행정 영역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이 몸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삶의 질 정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러한 협력 구조가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공간 계획과 함께 지금 저희가 동시에 하고 있는 것 이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앞서 공간 계획과 유사하게, 태양광, 혹은 특히 홍성의 경우 축산 분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쪽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귀결되는 영역은 이러한 체계의 전환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결국은 주체의 문제로 가게 되고 마을 공동체 혹은 귀농 귀촌한 청년 공동체, 혹은 기존에 계셨던 주민분들과의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지역사회라고 하는 영역의 삶의 질을 고민함에 있어서도 오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민간의, 지역의 주체를 육성하는 쪽으로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 두 번째 지점이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민관 거버넌스 회의 홍성통’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버넌스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홍성통 이야기를 할 때 핵심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슨 제도적인 기반, 조례 같은 것도 없고요. 대표자, 장이라든지 어떤 예산 배정이라든지 어떤 지원 체계 같은 것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열린

구조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이면서 혹은 한 10개 정도 되는 분과 별로 행정 담당자, 실무자, 주로 주무관님들하고 민간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시면서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논의를 하고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분야의 아이디어들을 계속 제시하고 그것과 관련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성군 지역 차원에서의 논의들을 함에 있어서 아까 행정의 조직 체계 개편 쪽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의 그런 통합적인 조직 체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간 영역에서의 네트워킹과 협력도 이 두 개의 다리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홍성군에서 실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협력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1차적으로는 각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안부의 청년 마을 사업 따로 농식품부의 에너지 전환 따로 햇빛 소득 마을 따로가 아니라 지역 차원의 그런 사례들이 조금 더 같이 교류되고 취합될 수 있는 구조에 앞으로 같이 좀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좌장: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

- 고맙습니다. 황바람 전문위원께서는 홍성군에서 지금 일선 행정을 하시면서 또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실천들을 같이 진행하고 계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선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셨고, 지역사회라는 화두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가 삶의 질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삶의 질 정책에서 농식품부나 해수부에서 총괄적으로 이 정책을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 제대로 작동하

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자체라든지 일선에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중앙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 정책이 실제 체감되도록 만들어내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흥성군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정책을 풀어가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경청해야 될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농민신문 흥경진 부장님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토론자: 흥경진(농민신문 정경부장)

- 네, 안녕하세요. 흥경진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이나 스펙트럼, 그런 것들이 논의된 것 같아서 어떤 한 가지 부분에 논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한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농경연에서 지난해 기준 농촌 주민 정주 만족도 결과를 최근에 발표해 주셨어요. 조사 결과를 보면 정주 기반 전반적인 만족도가 도시는 7.0 그리고 농촌은 6.6으로 상대적으로 도시가 나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과 제약이 있어도 농촌은 여전히 매력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앞서 사례 발표자분들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서울대 건강 문화사업단 조사를 보면 정신 건강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데는 농촌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물론 신체 건강을 따지면 경기도 과천이나 대구 같은 곳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조사였지만, 정신 건강 지수 상위 톱 5 지역을 보면 경북의 예천, 전남 곡성·무안, 경북의 상주, 경남 창녕이 올랐습니다. 대체로는 그 지역의 공동체성, 그리고 주민들 간에 나눌 수 있는 정

같은 부분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이렇게 답을 해준 조사 결과를 봤는데, 이런 매력이 그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 그리고 농촌의 향수를 가진 이들에게 서만 향유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공유되고 확산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 현재의 정책을 보면 청년에 굉장히 많은 방점이 찍혀 있는데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보면 생활인구나 체류 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농촌 유학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박형호 박사님 발표에서도 생활인구를 확산하기 위한 과제로 중간 지원 조직을 육성하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농촌 학교가 그런 매개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지자체나 교육청의 시책일 수는 있겠는데, 도시의 초등학생이 농촌 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자연이나 생태를 경험하고 주로 부모가 동반해서 가다 보니까 농촌의 상황을 두루두루 경험하는 그런 컨셉이죠. 그렇게 하면서 발생하는 효과는 표면적으로 체류 인구가 늘어나는 것 뿐 아니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헤아리는 농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 깊은 정서적인 연고를 품는 관계인구의 모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앞선 발표에서 생활인구 통계도 나오고 분석도 되고 있지만, 양보다는 질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그 체류 인구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면 대체로 서울에서의 물리적인 접근성,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결국 그 지역에 소비를 위해서 가는 거지 관계나 그 지역의 전체적인 생산성,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높여주기 위한 그런 인구의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계인구라는 것은 일본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고 우리는 그걸 연구하다가 생활인구로 행정적으로는 쓰고 있는데 오늘 논의에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관계인구를 육성하는데 조금 더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데 논의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

서는 지금 청년 세대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나 포석 차원에서 농촌 유학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 우리가 삶의 질을 얘기하려면 일반적으로 농촌 정책, 농촌의 복지 문제를 타겟팅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다 농업 정책까지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많은 청년들을 유인해서 살 만한 공간을 만들려면 결국은 소득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을 다 합쳐서 연 소득이 적어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돼야 거기서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정착도 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농사를 규모화하기 어렵다 보니까 농업을 가지고는 농촌으로 올 수 있는 엄두를 못 내고 오늘 사례나 토론으로 발표해 주신 분들 보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워케이션이라든지 예술 문화 창작 활동으로서 기회의 땅, 이런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농촌에서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농업 생산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새로운 인구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일반 회사도 좋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농업법인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법적인 농업인 지위도 누리는 그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농지 관리 방식의 변화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구양리 이장님 말씀하실 때는 지금 우리 공공 비축 농지가 전체 농지를 150만 헥타르 정도로 봤을 때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걸 5%까지 높이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 공공 비축 농지를 늘리면 그만큼 정부가 청년농을 유인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어떤 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부분부터 해서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영농 농사 소득 외에 다른 부가소득을 올리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농지를 기반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태양광 시설은 내부 연한을 20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REC 가중치를 잘 활용해서 농촌으로 유인되는 청년이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안착

할 수 있도록 이 REC를 보너스나 보조금 개념으로 생각해서 잘 결합을 시키는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가정을 이루고 최소한의 소득이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농업이든지 농업 외에 어떤 역할이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 끝으로 정부에서 균형 발전과 지역 활성화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좋은 사례는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줄고 지역이 과소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방전과 해법을 내리기가 조금 어렵죠. 그런 관점에서 10년 뒤나 20년 뒤에 농촌은 아무래도 현재 인구 구조를 기본값으로 고령화가 더 진전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돌봄이나 의료 서비스, 교통편의 확보 대책을 촘촘히 하는 것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농촌의 의료나 교통이나 복지 영역에 이것을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 이냐를 고민하는 부분은 농업계뿐 아니고 전 산업계나 다른 부처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

- 네, 홍 기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농촌이 갖고 있는 매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더 아래 세대까지 겨냥한 농촌 유학 같은 그런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농업 부문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농지 관리라든지 또 비축 농지 확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재생에너지로 인한 소득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규호 입법조사관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토론자: 김규호(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네, 안녕하십니까. 입법조사처의 김규호입니다. 지금 토론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아래 플로어에 계시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좀 농업계 밖에 있는 이야기들, 이게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형호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 그리고 구양리 전주영 이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박형호 박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생활인구 관련 데이터들을, 그 민간의 자료를, 그리고 통신사 자료를 구입해 가지고 결합해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 이제 국가 데이터처죠. 빅데이터과 쪽에 저도 어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고 왔는데, 아마 분석하실 때 좀 많이 아쉬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수도 많고. 어쨌든 그게 좀 더 전국적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 생활인구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에 있다 보니까, 생활인구 자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국한될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학하시는 분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왔는데요.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법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인구를 그런 쪽으로 옮기든가 해서.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그걸 가지고 볼 때에 더 많은 시사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아마 예산이 제가 지금 보니까 제공하신 그 자료가 한 20억, 22억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그 정도는 지금 대단히 시급한 주제니까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또 지금 해볼 수 있는 게 행정 자료를 더 많이 붙이는 것을, 이제 국가데이터처로 바뀌면서 그 고민을 구 통계청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본부

가 안에 생겼더라고요. 농경연 측에서 그쪽에 아이디어도 제시하시고 과제로 제시하셔서 예를 들어 건보라든가 국세청 같은 자료들을 좀 결합할 수 있고 하면 생활인구의 인구 사회 경제적인 스테이터스와 매치되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행정 자료는 개인정보의 문제 같은 것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고, 국가적으로 활용해보고자 하는 방향이니까 추진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아까 이제 옆에 흥경진 부장님께서 농촌 유학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은퇴자, 그러니까 55년 63년 사이에 출생하신 1차 베이비부머와 그 이후에 2차 베이비부머들, 은퇴자나 조기 은퇴자분들이 많이 제2의 인생 내지는 여러 가지 생활 근거지 몇 곳을 가지고서 지내시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안동과 평창 보여주실 때 평창 같은 경우에 관광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은퇴를 염두에 두고 봉평이나 이런 쪽을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유형화해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석들이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 그리고 지역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종합적이고 정리된 자료가 목록화돼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정말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가령 보존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많은 지자체 자체 보조로 갖춰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운영비도 들고 관리비도 들고 하는데 잘 활용은 안 되고, 이런 걸 바꿔줘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처음에 용도가 이거였는데 왜 지금 와서?’라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규제샌드박스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특정 기준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전국적으로, 산지에 있는 그런 종류의 시설들을 한번 목록화해서 많이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 번째는, 저는 실패 사례집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수 사례집도 받았는데 이거 정말 현장에서 많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실패 사례집은 익명 처리를 하든지, 인터뷰도 힘들겠지만, 한국의 상황이 지금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해서 좀 필요하다, 그래야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 전주영 이장님 말씀대로 결국 신재생 에너지는 영농형 태양광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매우 넓은 용지 면적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셔서, 2050 탄소 중립 정보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예를 많이 듭니다만,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 포도 농사가 더 잘 지어지더라’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근데 프랑스에 관련 여러 수치가 있습니다. 2050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도전적인 수치로 놓고 보아도 목표치가 프랑스 전체 농지의 0.5%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아까 지금 40%, 20% 이 정도 수준은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임차 후의 문제 그런 것들도 있고, 투자 회수 기간이나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설비를 깔고서 철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서 끝나지만, 농촌 마을은 20년을 가잖아요. 20년 동안에 어떤 갈등이나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농업계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희망적이기보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또 에너지나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탄소 중립 정보원 근거로 보여주신 수치는 급진적인 안을 가지고서 ‘LNG 2050까지 완전히 퇴출’이라고 하는데, 사실 LNG는 절대로 퇴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화석연료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브리지 자원이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지금 실제로는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저번 달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1개의 우리나라 발전원들이 거기 나옵니다. 2040까지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양광은 나오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영농형 태양광은 어느 정도 가자, 라든가 상호 피드백을 하며 그런 부분들을 넣어

야 합니다. 이것이 전기사업법상의 계획이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가 걸려 있고, 무조건 깔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도 참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햇빛 연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솔직히 해야 될 것이 물론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대의에 의해서 가는 길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순수하게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어떤 종류의 잉여 소득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나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이전소득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가중치 말씀하신 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한전에서 먼저 정산해 주고 사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안에 있는 기후 환경 요금은 청구가 되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후 환경 요금이 70% 올랐거든요. 이게 사회적 분담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좀 사회적 합의라든가 납세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단순히 계통에 물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부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효전력, 무효전력 등 굉장히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이 나중에 올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감당해 보고 가보자라는 것이라면은 그런 논의가 좀 더 정직하게 펼쳐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연금 적립하지도 않았고 부과식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 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나눠 가지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그런 큰 틀에서의 합의를 정직하게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좌장: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

○ 네, 고맙습니다. 연구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농업 농촌 내부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생각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활인구 통계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휴 시설 활용과 관련된 규제 완화, 또 재생에

너지 생산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폭넓은 시야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단 농촌 활성화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기도 합니다. 또 김규호 입법조사관님께서도 지금 연구를 하면서도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들 계속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연구 기관들 이야기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MI 어촌연구부장 맡고 계신 박상우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토론자: 박상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 네, 반갑습니다. 농촌하고 매우 닮아있지만 또 사뭇 다른 어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은 앞에 여러 발제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착 생태계, 그리고 생활인구, 에너지 자립, 그다음에 현장 현안 해결과 관련된 네 가지 관점에서 아마 제가 어촌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촌 관점의 내용들을 좀 공유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촌에 가면 우스갯소리로 ‘동네 강아지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어촌을 상징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정부나 지자체, 여러 유관 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는 귀농어·귀촌, 특히 귀어·귀촌 정책이 과연 정말 실효적인 부분이 있을까?’ 또는 ‘한계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되짚어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어촌의 경우에는 제가 숫자를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2022년 대비 2024년에 한 반토막 정도 난 것 같아요.
- 그만큼 어촌이나 이 산업 현장에 진입 장벽, 허들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의 방식은 ‘그 허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신규 진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성공 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에 대한 접근이 대단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

지만 생산 영역 이외에 유통, 가공, 관광, 비즈니스 영역까지 사실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들을 전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책은 대단히 생산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좀 매몰되어 있는 문제, 이 부분들이 아마 새로운 일자리 아니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의 문제 또는 기술·교육의 문제 또는 기존 공동체와의 융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적인 생태계, 특히 진입 허들이 높은 수산 어촌의 생태계 변화가 있지 않다면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청년·여성·어린이·외국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느끼는 우리 수산 어촌의 문제점, 한계들을 듣고 이걸 법 제도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는가를 찾고 있고요. 이것을 정리해서 국회로 가져가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또는 부처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는 생활인구 문제인데요. 저희는 어촌을 2,915개의 실질적인 조사구를 별도로 설정을 해서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협의의 어촌이죠. 1년에 790만 명, 이 작은 어촌에 한 3조 5천억 정도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있고요. 이걸 조금만 더 확장하여 연안에 있는 읍면동으로 하면 한 40조가 됩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우리 어촌사회 어촌 공동체에 또는 농촌·농촌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라고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저는 확연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새로운 플레이어의 유입, 이 새로운 플레이어가 독립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공동체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 그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참고로 최근에 어촌 사회에서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조직 중 하나가 협동조합입니다. 지금 농어촌의 협동조합이 제가 알기로 한 2만 8천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어촌 지역에 최근 1~2년 동안 새로 생긴 협동조합이 한 500개 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502개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어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준의 공동체들이 그만큼 폐쇄적이었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유입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어촌 사회 안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발제 내용 중에 에너지 자립과 어촌형 모델들도 좀 논의가 됐었는데요. 들으면서 계속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통적으로 수산업 또는 어업에서는 가장 많은 경비를 차지했던 게 유류비 또는 인건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기 사용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어가 경영이나 지역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이건 어업이든 양식업이든 다 마찬가지 문제인데 이걸 지금 기준의 방식에서 정부가 일부 보조를 해주거나 일부 태양광을 설치하든 이런 문제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산지소의 개념들이 저는 적용이 되면 좋겠다 하는데 이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농촌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 갈등 관리 이런 문제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거기 에 이제 지자체, SPC, 주민공동체 조합, 여러 가지 환경단체까지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이 있는데 이들 간의 논의 합의 이행, 그리고 환류의 일련의 과정에서 저는 리빙랩 방식의 모델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확산되는 이런 구조들이 어촌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 마지막으로 저희가 삶의 질 정책 전문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중에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인사 말씀에서도 주셨는데, 해수부가 어촌형 복지 정책으로 어복버

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 사업으로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미 있게 했던 노력들이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정착되고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게 저 국토의 끝단에 있는 섬 어촌 마을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발현되지 않는 현장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작업을 좀 충분히 했고요. 여기에는 의료 복지부터 문화 환경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개중에는 이제 농촌과 매우 흡사한 문제도 있고 어촌의 특수한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찾아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거, 정부나 자체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요소들인지 또는 개입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기획,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정부의 재정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업이 상당히 경직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소규모의 파일럿 사업을 통해서 실증, 모니터링과 평가를 가지고 정부 재정이 없으면 기금이나 농어촌 상생기금이나 이런 걸 태워서 시범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본 사업을 정책화하는 과정들이, 저희 연구 기관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던 일이긴 한데,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어복버스라는 하나의 형태 말고도 현장에는 무수히 많은 현장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계속 경직된 정부 재정 사업으로 다 해결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소규모 실증 사업들을 통해서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

○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어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얘기되던 문제였죠. 그런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해법으로서 최근에 협동조합 증가 같은 트렌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KMI에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어복버스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 앞으로 고민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KREI 삶의질정책연구센터 권인혜 팀장님께 토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자: 권인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조사·연구팀장)

○ 네, 저는 관계인구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박형호 박사님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그리고 팜앤디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도 기존에 농촌에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례들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관계인구 정책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관계인구 활동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기존의 도농 교류와 뭐가 다른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도농 교류라는 키워드로 정책 논의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됐던 시기가 이제 1990년대, 2000년대에 한참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시장 개방의 배경이 있었고 농업의 위기감 이런 것들 속에서 농외소득을 굉장히 좀 증대해야 하는 그런 긴박한 필요성, 이런 것에 따라서 논의가 많이 촉발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농외소득이라든지 그런 차원보다도 조금 더 작게 보면 지역 활성화 정도의 차원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단순히 당시에 도시민들을 조금 더 농촌으로 끌어들이고 농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일종의 소비자와 같은 그런 역할로 확대시키는 이런 관점이 강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관계인구 정책은 소비자를 어떤 게스트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

트너면서 그 지역의 동반자로 이끌어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지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게 다른 것 같고.

- 또 하나의 차이는 지금은 개인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시기면서 그 다양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앞서 팜앤디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도 ‘가치관이나 소비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지역의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지역을 재발견해야 된다’라는 그런 키워드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관계인구 관점에서 보면 농촌이 단순히 관광을 즐기고 여가를 보내고 체험을 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다른 방식으로 실현하고 싶은 이런 공간으로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러스틱타운을 비롯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도전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계인구 논의가 단순히 농촌의 삶의 질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논의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소멸, 농촌 소멸이라는 담론이 굉장히 중심에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농촌을 통해서 가치있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농촌의 삶도 더욱더 이제 올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토대로 두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인구 정책은 말 그대로 관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 중심의 사업과는 당연히 다르고 기존 관광이라든지 체험 중심의 사업들이랑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형호 박사님 사례에서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질적으로 심화를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매개자, 연결자의 역할인데요. 이게 사실 워딩은 매

개자와 연결자인데 사실은 관계인구 활동을 추진해 가는 중심적인 주체라고 봅니다. 특히 도시민도 그렇고 농촌 지역도 그렇고 관계인구 정책 활동과 관련된 기반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가면서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파트너십 관계까지를 형성하는 굉장히 섬세한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섬세한 케어가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주체로서 매개자, 연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이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조금 더 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에서 조금 더 플랫폼의 기능을 가지고서 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러스틱타운처럼 민간 협동조합 부문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주다움 같은 경우도 정부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사회적·공익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런 토대들을 만들어 나가는 조직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이런 부분들의 사례들이 쌓이고 기반이 확장되면 나중에는 지역에서 굉장히 다발적으로 여러 주체들이 그런 활동들을 끌어가고, 또 그중에서 어떤 조직은 조금 더 플랫폼의 통합적인 기능들을 하고 이런 생태계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 이게 관계인구 정책이기 때문에 기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이나 체험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굉장히 도시민 입장에서도 지속적이고 고강도의 에너지를 투입하는 일이고 지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강도의 인풋이 있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밸런스 있게 조절해 가면서 운영해 갈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호 간의 투입과 인풋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았을 때는 사실 이 관계인구라는 것이 더 발전되어 나가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운영 주체의 역할이 많이 강조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

을 보면 사실 잘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사회·경제적인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거나 인적 기반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그리고 지원을 함에 있어서 다만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사실상은 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행정적인 프로세스 상에서 자율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제약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운영하는 조직의 자율성이나 유연성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관계인구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과 거주가 자유로운 사회적·문화적·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관계가 무르익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 관계인구 정책에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다지역 거주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행정적인, 제도적인 부분들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청년층이나 중년층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직장 근무와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농촌 유학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 유학에 대한 환경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조금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열렸을 때 관계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를 떠나서 하나의 새로운 큰 문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계인구 정책이 그 어떤 정책보다도 사실은 긴 호흡이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질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정책이 양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들을 디펜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관계인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당장 예산을 얼마 투입했는데 관계인구가 몇 명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맨 앞단에서 관계인구 정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에서, 관계인구 정책이라는 게 정말 우리 농촌, 또 대한민국에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해 이런 것들을 계속 높여가면서 정책에서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벌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좌장: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

○ 예, 고맙습니다. 관계인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하고요. 지금 마지막 토론 앞두고 있는데 혹시 한 분 정도만 이렇게 잠깐 간략하게 의견 주시거나 하실 게 있습니까?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중 질의: 윤순덕(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안전과장)

○ 말씀 잘 들었고요. 의미 있는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완주 이서면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다 보니까 강제로 지방 이전에 의해서 완주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실 그 주변을 둘러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5일은 거기 완주에서 생활해야 되고 이틀은 또 서울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착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서면이라는 그 지역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필요로 하는 기초 생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촉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만족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초 생활 서비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개수를 세면서 이렇게 마을을 지나다녀봤거든요. 그런데 목욕탕부터 뭐 이발관 면사무소 식당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서 생활인구든 그 지역의 정주 인구든 유지가 되려면 최소 생활 서비스가 좀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장: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

○ 네, 고맙습니다. 농진청의 윤순덕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식품부 이아름 사무관님께서 정리하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지정토론자: 이아름(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네,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가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의 관심이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도시의 청년이 도시 소재 기업을 연결해서 지역의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게 성공적인 사례로 확산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셔서 정부에서 이 의견을 좀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 컨퍼런스 중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소득 보장, 일자리에 대한 내용 말씀 주셨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해서 중간조직으로 육성을 함으로써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 나가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 할 수 있는지의 방안에 대한 저희의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고령자를 위한 돌봄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저희 정부 차원에서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정부가 '햇빛 소득 마을을 농촌 소멸 대응 핵심 정책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500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신안군이나 구양리 사례가 저희한테는 대표적인 모델이고 이게 정말 농촌 소멸의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경관 훼손 논란 등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더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국민하고도 더 큰 틀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

○ 네,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은 충분히 들으셨을 테니까 계속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햇빛 소득 마을뿐만 아니라 또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큰 사업도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그래도 간략하게 키워드만 조금 정리해 본다고 하면, 오늘 컨퍼런스 주제인 농촌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합의를 한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면에서 새로 농촌에 들어가는 생활인구 청년이든 이런 사람들 을 위한 기존 주민들 간의 세대 통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할 주제인 것 같고 우리 삶의 질 정책도 그렇고 농촌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현장의 어떤 거버넌스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숙제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기본 원칙 자체는 농촌 공동체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사회적 전환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삶의 질 컨퍼런스 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성장공간, 기회의 땅: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묻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1833-5500 F.061) 820-2211



ISBN 979-11-6149-817-1